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조성대 | 한신대학교

| 논문요약 |

한편으로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간이론(spatial theory)을 이용한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 간 경쟁구도가 어떤 균열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간분석으로 획득한 한국정치의 공간지도는 정당 간 경쟁구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주의 균열과 남북/한미관계 및 경제성장과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정책 균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셋째, 지역주의 균열과 무관하며 갈등대체(conflict displacement)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념적 균열은 존재하는가 등이 이 글의 경험 분석의 주제들이다. 경험분석에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17대 대선 직후 전국 유권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균열구조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제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균열구조의 대체(displacement) 효과를 지니며 등장하는 새로운 균열구조는 새로운 갈등을 내포함과 동시에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과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반영되는 정치적 갈등구조의 안정적 토대를 제공한다(Bartolini and Mair 1990).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균열구조의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의 정렬구조(partisan alignment)와 정당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립셋·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노동-자본의 균열구조와 근대 유럽의 보수-사민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의 대립과 녹색당의 등장, 그리고 키셴트(Kitschelt 2004)의 자유지상주의-권위주의의 균열구조의 등장과 탈산업사회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체계의 변화 등은 유럽 사회의 균열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당체계와 선거경쟁의 변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구조의 해체 및 지역주의의 등장과 성격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이갑윤 1998; 조기숙 2000), 대안적인 균열구조로 세대(강원택 2003), 탈물질주의(마인섭·장훈·김재한 1997), 그리고 자유지상주의-권위주의의 등장(장훈 2004) 등이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지배적 성격과 대안적 균열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한국의 정당 혹은 선거정치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연구방법과 변수의 조작·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거시적 접근은 경험분석과 증거 제시 면에서 그리고 미시적 접근은 지역주의와 그 밖의 정책적 균열들이 정당체계와 어떤 거시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지역주의의 대안적 균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론의 시험적 적용이나 경험분석에 있어서도 비교적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경험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

안적 균열들이 현재의 지배적인 지역 균열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혹은 균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정당체계와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균열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일차원 틀(uni-dimensional frame)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순서척도로 조작된 진보-보수의 일차원 이념변수의 사용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균열의 구체적인 성격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정치체제의 이념적 갈등 구조는 일차원적이라기보다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열구조와 선거경쟁, 그리고 정당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접근은 다운스(Downs 1957)의 일차원적 경쟁을 넘어 다차원 공간에서 정당 혹은 후보 간 경쟁구도의 잠재적인 이념 공간(latent ideology space)을 구축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히닉 · 멩거(Hinich and Munger 1994)에 의해 제시된 공간분석은 유권자들에 의해 인지되는 정당 간 경쟁구도(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2차원의 이념공간에 경험적으로 복구해냄으로써 한 사회의 복잡한 정치경쟁 구조를 비교적 단순하게 제시하는 발견기법(heuristic method)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선거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주요한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단순히 정당 간 경쟁의 이념공간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은 복구된 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이념지도 상의 정당 간 경쟁구도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균열구조와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경험분석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분석으로 획득한 한국정치의 공간지도는 정당 간 경쟁구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주의 균열과 남북 혹은 한미관계, 경제성장 및 복지, 환경, 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 균열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셋째, 지역주의 균열과 독립적으로 분포하여 실제 갈등대체(conflict displacement)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념적 균열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당체계는 다양한 균열체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험분석에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17대 대선 직후 전국 유권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글의 순

서는 다음과 같다. 2절은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럽의 이론과 경험을 통해 균열구조와 관련하여 정당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조건들을 살펴본다. 3절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균열구조인 지역주의와 대안적 균열구조를 모색한 연구들을 평가하고 기존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4절은 이 글의 경험분석에 사용되는 히닉(Hinich 2005)의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과 데이터,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방법을 설명하며, 5절은 경험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추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은 연구 요약과 함께 정치적 함의와 전망을 제시한다.

II.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균열(cleavage)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어지는 현상을 지칭하며 정당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균열구조를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정치구조를 형성한다. 즉 균열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 정당 간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써 정당체계를 연결하는 주요한 배경 구실을 한다 하겠다. 서구 정당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립셋·로칸(Lipset and Rokkan 1967)에 따르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근대 이후 유럽사회에 중심-주변, 교회-국가, 농촌-도시, 그리고 자본-노동의 네 가지 사회균열이 형성되었으며 균열의 배열정도에 따라 정당체계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산업혁명의 결과 형성된 노동-자본의 대립은 1920년대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평등과 효율, 국가와 시장, 분배와 성장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가치의 대립과 경쟁의 정당구조를 가져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의 사민당과 기민/기사연립, 프랑스의 사회당과 드골주의 정당 간의 경쟁구조를 틀지어왔다.

서구 정당체계가 계급적 균열이 구조화된 것이라는 립셋·로칸의 이른바 “동결테제(frozen thesis)”에 이어 1970년대 경제적 풍요와 번영의 시기에 시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즉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 가치관의 등장을 반영하는 균열이론이 등장했다.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7)는 산업사회의 발달

로 인한 경제적 풍요와 평화의 시기에 성장-분배와 같은 물질적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오히려 환경, 여성의 권리, 인권, 교육, 반핵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등장해 전통적인 계급균열을 완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탈물질주의 균열구조의 등장은 정당체계에 반영되어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출현을 가져왔다. 즉 계급에 기반한 좌-우의 균열축을 횡단하는 새로운 균열축, 즉 물질주의-탈물질주의적 가치의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양자를 지향하는 정당 간의 경쟁구조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사회에서 계급균열과 탈물질주의 다음으로 제기된 균열은 자유지상주의-권위주의(libertarian vs. authoritarian) 가치의 대립이다. 키셴트(Kitschelt 2004)는 198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체계가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전통적인 좌-우의 선호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자유지상주의라는 사회적 삶의 통치구조(governance structure of social life)에 대한 선호에 따라 정렬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전자의 경우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일정한 규범들과 규제원칙들, 특히 한층 더 높은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권위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적 삶의 양식들을 선호한다. 여기서는 법과 질서, 종교적·전통적 가치와 위계질서가 강조된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삶의 양식에 대한 개인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과 존중, 그리고 집단적 구속력을 지니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의 자율적인 참정권을 선호한다. 키셴트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1980년대 이후 유럽 정당체계의 정렬에 있어 전통적인 노동-자본의 균열이 자아내는 좌-우의 균열이 축소되는 반면 사회문화적 권위주의-자유지상주의 차원의 균열폭이 확대되었고, 주요한 정당들이 이 새로운 균열축을 따라 정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유럽의 경험은 우선 균열구조의 존재가 정당체계를 형성, 유지,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한 독립변수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정당체계가 현존하는 다양한 균열들의 구조화된 힘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정당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이나 혹은 균열들의 상대적인 사회지배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균열구조의 변화의 폭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정도로 확대될 경우 이는 정당체계의 재편성(realignment of party system)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당재편

성 이론은 네 가지 단계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균열구조의 변화 혹은 중대 쟁점(critical issues)의 등장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택기준의 변화; 둘째, 변화된 유권자들의 선호를 동원하기 위한 지지기반의 재구성과 정당의 조직화; 셋째, 중대선거로 인한 다수당의 지위변화; 넷째, 유권자 선호의 장기간 지속과 정당체계의 안정화 과정이 그것이다(Key 1955; Sundquist 1983; Brady 1988). 요컨대, 중대 쟁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과 확대, 유권자내부의 새로운 다수(majority)의 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체계의 재정렬 과정이라 하겠다.

새로운 균열의 등장이나 약했던 균열의 성장 모두가 정당체계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샤프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60)에 의하면, 완전한 정치적 재편성은 하나의 균열에서 완전히 상반된(inconsistent) 다른 균열로의 이동(shift)을 요구한다. 새로운 균열구조는 현존하는 지배균열과 양립불가능하고, 그 발전은 한편으로 현재의 지배균열이 발생시키는 갈등구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갈등구조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갈등의 어느 한 측면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다수와 소수를 형성하고, 결국 선거공간에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새로운 할당을 가져온다. 즉, 정당체계의 재편성은 지배균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격변기를 겪지 않는 대부분의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등장하거나 이전에 주목받지 못한 균열의 현저성(salience)이 상대적으로 증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균열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균열의 성격과 위상은 기존의 지배균열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균열들이 기존의 지배균열과 평행하거나 중첩된다면 대안적인 균열로서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지배적인 균열구조에 흡수되거나(co-opted) 혹은 지배균열의 하위 균열로 기능하여 지배균열이 만들어낸 기존 정치적 질서나 정당체계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등장은 정치적으로 녹색당이라는 신생정당의 출현과 독일에서 연방의회 진출이라는 부분적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환경이나 개인적 시민권 분야에서의 그들의 쟁점소

유권(issue ownership)은 독일의 시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등의 기존 정당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기도 했다. 즉 기존 정당들이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통합하려 했고, 따라서 기존의 좌-우 균열구조와 부분적인 “겹쳐짐”의 형태로 나타났다(김재한 1994).

따라서 정당체계의 구조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서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균열들이 과연 지배균열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념공간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양한 균열들이 지배균열과 같은 차원(dimension)에서 전개되는지 혹은 지배균열과 직교하는(orthogonal) 차원에서 펼쳐지는가는 정당체계의 유지-강화 혹은 변화-대체의 전망에 대한 진단의 경험적 기준을 제시한다.

III.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균열구조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갈등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배적 균열구조로 지역주의를 들고 있다(이갑윤 1998; 조기숙 2000; 조성대 2004; 안순철 · 조성대 2005; 박찬욱 2005; 최준영 · 조진만 2005). 기존 연구는 한국사회 지역주의가 계급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이념적 균열과 유권자들의 비합리적 심리와 엘리트의 동원전략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향리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장집 2003; 김만흠 1994). 지역주의 정당체계는 지역주의의 이중적 성격이 선거 공간에서 유권자들과 지역정당들을 연결시킨 결과였고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여야 간 정권교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당이 선거공간에서 지역주의의 한 축인 향리성에 기반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선거전략으로 채택하는 한 쇠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1997년 민주화세력에 세력에 의한 실질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균열의 강도가 쇠퇴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히려 1997년 15대 대선은 유권자 규모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영남지역과 분단이후 한국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온 반북-보수 이념이 결합된 지배구조에 대해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DJP연합)이라는 역지역주의 선거전략이 성공

한 사례였다.

2002년의 16대 대선 또한 소위 '영남 후보론' 즉,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을 잠식해간다는 또 다른 유형의 호남+ α 의 지역연합 동원 기제가 성공한 경우였다. 그리고 2007년의 17대 대선 또한 시도별 투표결과만을 고려했을 때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투표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던 듯하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균열을 따라 이합집산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영남 중심의 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과 호남 중심의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통합민주당의 경쟁구도와 두 번의 정권교체는 정확하게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정치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당체제는 지배균열에 상당한 폭의 변화가 수반되어 기존 정당들이 더 이상 유권자 동원기제로 활용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그동안 대안적 균열구조의 존재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6대 대선 이후 세대 균열의 등장에 대한 진단은 대안적 균열구조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었다(강원택 2003; 조중빈 2003). 아울러 지역주의 균열과 더불어 다양한 균열들의 복합적 존재에 대한 모색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마인섭 외(1997)는 한국사회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대체로 1961년 이후 출생한 세대, 고학력층,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학생층에서 강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어진 연구에서 마인섭(2004)은 한국사회 균열구조로 지역 균열, 계급균열, 탈물질주의 세대균열을 꼽고, 이러한 사회균열구조의 다원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현출(2005) 또한 냉전·권위주의적 차원 외에도 신자유주의, 평등주의, 탈물질주의적 가치 차원의 이념적 대립축이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몇 연구는 유럽에서 발견되었던 자유지상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적 가치관이 한국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균열로 등장했음을 논증하기도 했다. 장훈(2004)은 16대 대선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전통적인 좌-우의 이념구도와 권위주의 대 자유지상주의의 구도가 결합한 가운데 진보 대 자유지상주의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며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념지도에서 사회경제적 배분이나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여부, 그리고

시민권 등의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국가주의에 대한 탈권위, 성장주의에 대한 탈물질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새로운 이념체계가 자유시장주의로 등장해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강원택(2005) 또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정치지형 내에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와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이념적 차원과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균열구조가 혼재되어 있으며, 결국 “반공이데올로기 거부와 자유주의의 강조가 한국사회 진보의 특성이며, 반공이데올로기 수용과 권위의 강조가 한국 사회의 보수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와 대안적 균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부분 기존 연구는 지역주의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방법과 변수 조작·사용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 의한 연구(예, 김만흠 1994; 최장집 2003)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지형에서 지역주의가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적 성격과 정당정치에 대한 규정력을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험분석이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리 모형이나 통계분석에 의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거주지나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수(예, 이갑윤 1998; 조기숙 2000) 혹은 지역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나간채 1991; 이남영 1998; 최준영 2008) 등을 통해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정당지지나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을 미시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권자들의 출신지역이나 지역감정이 어떻게 지역주의로 진행되었는지, 나아가 지역 균열이 전체 한국정치의 이념지형에서 정당 간 경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안적 균열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안적 균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균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균열들이 현재의 지배적인 지역 균열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혹은 균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 탈물질주의는 지역주의와 평행하는 균열을 보이는지 혹은 실질적인 대안적 위상을 지니는지, 혹은 탈물질주의와 전통적인 경제적 좌우 이념균열과는 어떤 구조적

관계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정당들이 과연 이러한 제반 균열들을 따라 정렬하고 있는지 혹은 정렬하고 있다면 어떤 구조를 보이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균열과 정당 간 경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탈물질주의나 자유지상주의 등의 새로운 균열 외에도 기존 정당 간의 경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온 대미관계, 대북지원, 혹은 사회양극화 등의 이슈가 지니는 이념적 균열이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복합적’, ‘혼재’, ‘중첩적’이란 추상적 추론 외에 구체적 경험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선거와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균열들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개념적으로 일차원 틀(uni-dimensional frame)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다차원 구조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균열들이 다차원 공간 내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유권자와 정당을 정렬시키는지에 대한 경험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이념위치, 혹은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이념적 갈등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조작된 진보-보수의 일차원 이념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변수를 통해 발견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의 이슈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들과 유권자와 정당을 연결하는 균열구조들을 요약해주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요약했듯이 유럽의 경우 노동-자본의 갈등이라는 전통적인 근대적 균열 이외에도 탈물질주의-물질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권위주의 등의 새로운 균열들이 다차원 이념공간 내에서 정당체계의 정렬구조에 변화를 수반해 왔다. 아울러 미국의 경험도 1960년대 이후 경제복지와 사회문화의 2차원적 균열구조를 따라 정당체계가 정렬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Enelow and Hinich 1984; Shafer and Claggett 1995; Stonecash 2006; 조성대 2007). 한국사회의 경험 또한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라는 지배균열 외에도 탈물질주의, 자유지상주의, 혹은 그 밖의 정책들—예, 한미/대북 관계, 그리고 경제복지, 교육양극화 이슈 등—이 자아내는 이념적 균열들로 인해 이념지형이 다차원 구조를 지녀왔다.

아울러 유권자들 또한 다차원적인 이념성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회의 이념구조는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혹은 균열구조의 수만큼이나 많은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균열, 유권자,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차원 구조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IV. 분석방법과 데이터

한 사회의 이념지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운스(Downs 1957)에 의해 소개된 고전적 공간이론(spatial theory)의 알기 쉬운 예제는 일차원 공간에서 유권자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부터 가장 높은 효용을 느끼며 그(그녀)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과 정당들 간의 상대적 거리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지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진보-보수의 일차원적 접근은 그 사회의 제반 균열의 성격을 반영하는 이념지형을 복구해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로우 · 히닉(Enelow and Hinich 1984) 그리고 히닉 · 명거(Hinich and Munger 1994)의 공간분석기법은 다차원 구조에서 후보자나 정당들 간의 권력 경쟁이 자아내는 이념지형을 하나의 잠재적 공간(latent space)의 구축하여 그 사회의 주요 균열들과의 연계를 복구해내는 방법을 제공하여 다운스의 공간이론을 한 차원 발전시켰다.

특히 히닉(Cahoon and Hinich 1976; Hinich 2005)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부여한 선호지수(온도지수)를 이용하여 유권자, 후보자, 정당의 좌표를 2차원 이념공간에 복구해 내는 프로그램화된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미국(Enelow and Hinich 1984; 조성대 2003)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Hinich, Khnelko and Ordeshook 1998), 러시아(Myagov and Ordeshook 1998), 칠레(Dow 1998), 터키(çarkoğlu and Hinich 2006), 대만(Lin, Chu and Hinich 1996), 한국(안순철 2001; 조성대

2004; 안순철 · 조성대 2005) 등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히닉의 공간분석기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 응답자들이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부여한 선호지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least squares)을 거쳐 2차원 이념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좌표와 각 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좌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로 표현된다. 이때 거리가 멀수록 효용의 정도가 감소하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수리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T_{ik} = \left(\sum_d (\Pi_{kd} - X_{id})^2 \right)^{1/r} + e_{ik}$$

여기서 T_{ik} 는 유권자 i 가 후보자 k 에게 부여한 온도지수($k = 1, 2, 3, \dots, p$ 그리고 $i = 1, 2, 3, \dots, n$), Π_{kd} 는 d 번째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투표자들이 인지한 후보자 k 의 위치를, X_{id} 는 동일차원내 유권자 i 의 위치를, r 은 파워(power) 함수를, 그리고 e_{ik} 는 무작위 오차항을 의미한다. 위 공식의 통계적 추정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최소제곱회귀(least square regression)를 통해 다차원 공간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위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차원 공간($d=2$ 그리고 $r=1$)을 기준으로 한다.

히닉의 분석기법을 적용해 17대 대선의 이념공간을 복구해내기 앞서 한 가지 선험적 가정(a priori assumpt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그동안 지역주의가 한국사회의 지배균열로 작용해 왔다는 점과 이념공간 내에서 지역주의와 그 밖의 정책 균열들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해야 한다는 방법상의 편의를 고려해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히닉의 공간지도의 특정 차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2차원 구조의 수평축(X 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다른 균열들이 지역주의와 동일한 갈등구조를 지니며 정당체계에 연계되는지 아니면 대안적 균열구조의 성격을 지니며 수직축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해 경험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어떤 변수를 통해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글은 한편으로 고향을 나타내는 설문을 호남(-1), 기타(0), 영남(1)으로 조작하고, 다른 한편으로 히닉의 방법에 의해 복구된 이념지도를 원점을 중심으로 1°씩 회전시켜 지역변수와 이념지도 상 유권자 위치 중 수평축의 좌표 사

이에 가장 큰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지니는 이념지도(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위치)를 측정했다. 즉 채택된 이념지도는 기본적으로 360개의 이념지도 중 호남출신과 영남출신의 유권자가 수평축의 좌우로 가장 큰 대칭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의가 수평축을 통해 통제된 것이라고 가정했다.

구체적인 경험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7대 대선의 이념지도를 그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17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과 후보자 중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 국민중심당과 이회창 무소속 후보,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 그리고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후보에 부여된 온도지수(10점 만점)를 허닉의 다차원척도법에 적용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통제된 17대 대선의 이념지도를 측정했다.¹⁾ 요인분석에서 필요한 적절한 분산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들이나 모든 정당들에 같은 온도지수를 부여한 응답은 모두 결측값으로 처리했다. 그리하여 총 1,201명의 유권자 중 경험분석에 사용된 관찰수는 973개가 되었다.

다음으로 여러 정책 균열들과 지역주의, 나아가 정당체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균열 변수의 각 항목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공간지도 상의 평균 좌표를 측정하는 작업으로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진보-보수의 균열과 정당들의 공간 좌표와의 관계를 통해 과연 한국의 정당체계가 어떤 정책 균열구조를 따라 정렬되어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다. 아울러 각 균열이 지역주의 수평축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병렬적 구조인지 아니면 수직적 관계인지—파악해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보다 통계적인 엄밀성을 갖추는 작업으로 공간지도 상의 유권자들의 좌표를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구분해 다양한 정책 균열 변수와 회귀시켜 한국사회의 이념구조가 어떤 정책균열 구조를 반영하는지 파악해 보는 방법이다. 특히 수평축에서 지역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회귀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 이인제 후보를 생략한 이유는 현대정치연구소의 설문에 민주당에 대한 온도지수 조사가 없어서 정당과 후보를 짝지을 수 없어 편의상 생략했다.

효과를 보이는 균열 변수는 최소한 지역주의와 동일한 차원의 갈등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수직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균열구조는 정책이슈와 연계된 이념적 대체를 자아낼 잠재력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²⁾

17대 대선의 공간지도의 성격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정치의 교정책(대북지원 이슈와 대미외교 이슈), 경제정책(재벌규제 이슈와 복지지출 이슈), 그리고 사회정책(경제성장 대 환경, 교육 경쟁 및 평등화, 사형제 폐지) 등이 사용되었다. 이 밖에 유권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또한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경험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17대 대선이 끝난 직후 전국 1201명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용되었다.

V. 17대 대선 공간지도와 한국정치의 균열구조

다음의 <그림 1>은 허닉의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복구한 17대 대선 당시 한국 정치의 잠재적인 이념지도이다.³⁾ 공간지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크게 두 가

-
- 2) 그동안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의 갈등구조에 대한 대안적 균열을 모색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안순철 2001; 조성대 2004; 안순철·조성대 2005). 샤흐스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60)의 갈등대체이론(theory of conflict displacement)을 경험적으로 적용한 이 연구물들은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사례에서 지역주의 지배균열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균열의 발견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설문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변수가 적었다는 분석 형식상의 한계와, 다른 한편 기존연구가 논증하고 있는 정책적 균열들이 한국사회 이념공간에서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어떤 관계를 지니면서 정당의 정렬현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추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 3) 공간지도 구축에 사용된 각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온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정동영(4.07, 2.61), 이명박(633, 2.86), 이회창(4.57, 2.53), 문국현(5.09, 2.41), 권영길(3.58, 2.39), 대통합민주신당(3.54, 2.48), 한나라당(5.98, 2.70), 국민중심당(3.39, 2.11), 창조한국당(4.11, 2.30), 민주노동당(3.71,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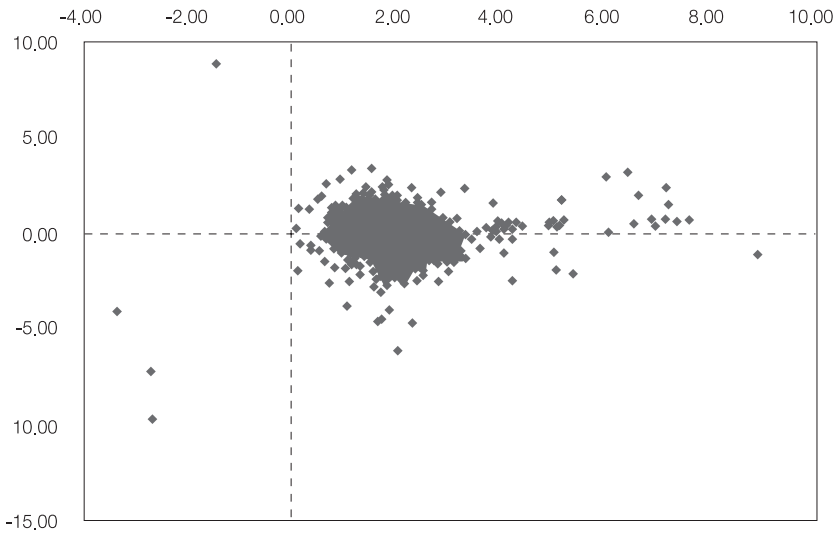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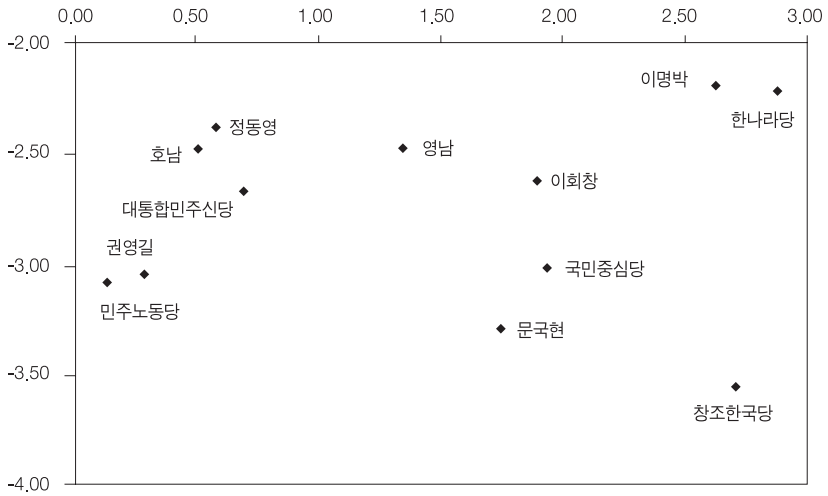
지 방법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요인분석이 설명하는 2차원 공간지도의 분산의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 후보자, 그리고 정당의 위치를 계산하는 회귀분석의 설명력(R^2)이다. 전자의 경우 17대 대선 공간지도는 요인분석의 전체 분산의 약 81%를 설명하고 있어 한국의 정치지형이 2차원 공간에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회귀분석의 R^2 또한 다차원척도법의 일반적 기준인 0.90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한국정치의 공간지도가 적절하게 복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복구된 공간지도는 수평축과 수직축을 따라 정렬된 정당과 후보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 한국정치의 이념지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영호남의 변수와 유권자의 수평축 분포의 상관관계를 최적화하는 공간지도를 구축한 탓도 있겠지만, <그림 1>의 17대 대선 공간지도는 호남 유권자와 영남 유권자의 평균 좌표가 공간지도의 수평축과 평행한 가운데 좌우로 대칭되어 수평축에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간지도 상의 수평축과 수직축의 규모와 요인분석의 분산정도를 고려했을 때, 수평축에서 발견되는 지역주의를 비롯한 제반 균열들이 한국 정당정치의 주요한 경쟁과 갈등구조를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축의 구조는 비교적 저발달된(underdeveloped)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상대적 위치만을 고려했을 때, 공간지도의 수평축은 좌측으로부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이회창 무소속 후보—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순으로 정렬시키고 있으며, 수직축의 경우 위로부터 이명박—정동영—이회창—권영길—문국현 순으로 위치시키고 있다.⁴⁾ 얼핏 보면 수평축의 후보와 정당의 정렬구조는 한국 사회의 정당 간의 일반적인 이념적 평가를 반영한 듯하다.⁵⁾ 이에 반해 수직축에서의 후

4) 공간지도 상의 정당들의 상대적인 정렬구조 또한 대부분 자당의 후보자들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지도 상 창조한국당의 위치는 바깥점(outlier)에 가깝다. 이는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이 유권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과 문국현 후보의 일인 정당이 가까웠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위치가 영남인의 평균 좌표보다 더욱 우측에 위치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좌우 분포 폭이 넓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간지도 구축 당시 유권자와 후보자/정당 간 공간거리를 제곱의 형태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림 1〉 17대 대선의 이념지도: 후보자,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념위치



*요인분석의 분산 정도: 1차원-65.24%, 2차원-15.61%, 계-80.84%. **R²=0.97

보자와 정당의 정렬구조는 문국현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상식을 벗어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민운동 경력이 있는 성공한 CEO 후보였던 문국현 후보가 대선 삼수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에 비해 더욱 참신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정부의 평가에서 경제적 실패를 으뜸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에서 여당의 정동영 후보가 전혀 두각을 내지 못했고 오히려 문국현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뚜렷한 경쟁구조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⁵⁾ 결국 공간지도의 수직축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들이 자아내는 균열을 따라 후보자와 정당들이 정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공간지도 상의 유권자들의 분포가 어떠한 정책 균열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첫 번째 정책분야인 정치외교 분야의 대북지원과 대미외교 이슈에서 각 항목 유권자의 평균 좌표를 공간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대북지원 이슈의 경우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랜 기간 동안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평화시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비핵·개방·3000”으로 대조될 정도로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두드러졌던 정책분야였다.⁷⁾ 물론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남북관계 이슈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

5) 예를 들어, 수평축의 후보자들의 정렬구조는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에 대한 진보-보수의 순서 척도(0. 매우 진보~10. 매우 보수)의 설문 또한 권영길(3.69)—정동영(4.17)—문국현(4.42)—이회창(5.87)—이명박(6.18) 순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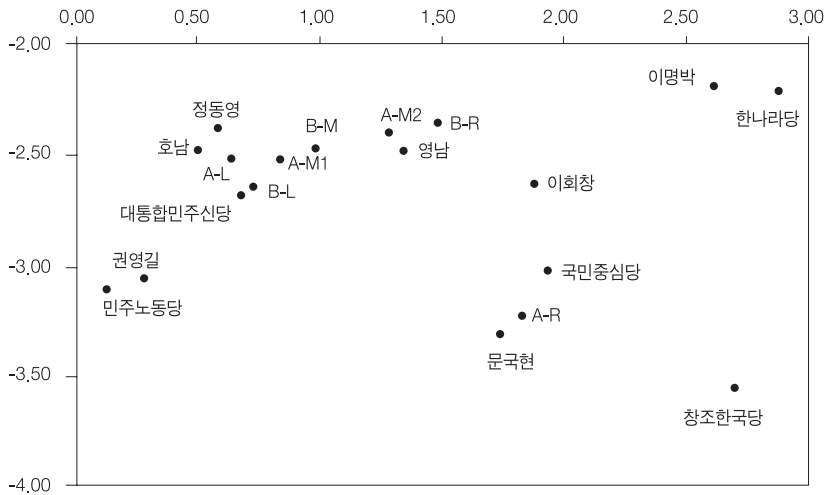
6) 한 예로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정책평가에서 대표공약인 중소기업공약과 일자리창출공약, 그리고 교육공약은 유권자위원회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이명박 후보의 공약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진보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진보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이념적 경쟁 구조는 문국현 후보 대 이명박 후보의 대조가 더욱 선명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국현 후보는 “진짜경제, 가짜경제”의 수사로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었다.

7)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참여연대 100인 유권자위원회에 제출한 대표공약은, 초기 공약인 ‘한반도 대화하 공약’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책인 ‘비핵·개방 3000’으로 변했다. 참여연대(2007) 참조.

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슈로 작용했다. 아울러 한미관계 이슈의 경우 또한 16대 대선에서 “반미면 어떻습니까?”라는 노무현 후보의 언설과 ‘미군 장갑차 사건과 촛불시위’ 등으로 여야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사건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북지원 이슈는 수직축보다는 지역주의 차원인 수평축과 더욱 뚜렷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균 좌표는 더욱 확대(A-L: 0.64, -2.51), 현 수준 유지(A-M1: 0.84, -2.53), 규모 축소와 인도적 지원(A-M2: 1.29, -2.40), 그리고 전면 중단(A-R: 1.83, -3.22)의 순으로 수평축에서 좌우로 전개되어 진보에서 보수로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수직축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평균은 수직축에서 상당히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한 사람들이 이회창 후보쪽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⁸⁾ 한미외교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평균 좌표는 독립적인 대미외교(B-L: 0.73, -2.65), 현상유지(B-M: 1.49, -2.47), 관계강화(B-R:

〈그림 2〉 17대 대선의 공간지도와 정치외교분야의 균열



A(대북지원):-L: 더욱 확대, -M1: 현 수준 유지, -M2: 규모 축소 & 인도적 부문만, -R: 전면 중단
 B(한미외교관계): -L: 더욱 독립적, -M: 현재 유지, -R: 더욱 강화

0.98, -2.36) 순으로 수평축에서는 좌-우로 그리고 수직축에서는 하-상으로 일관된 진보-보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평축의 변화량이 더욱 큰 반면 수직축의 변화량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이슈 역시 수평축의 균열이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평축이 지역주의 균열축으로 통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관계와 한미관계 이슈는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병렬되거나 혹은 흡수되어 대통합민주신당(과거 민주당-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 사이의 경쟁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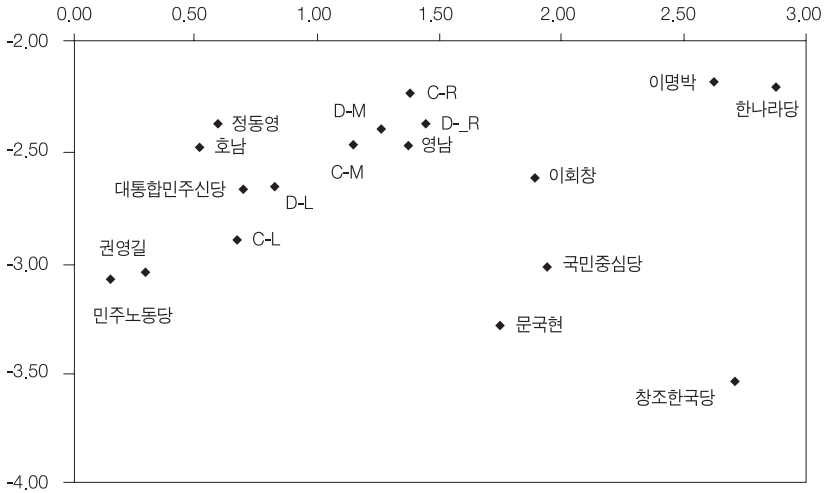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3>은 경제분야의 정책인 재벌규제와 복지지출 이슈의 균열구조를 공간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두 가지 이슈 중 재벌규제 이슈는 수평축과 수직축 모두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의 평균 좌표는 재벌규제에 전적 찬성(C-L: 0.66, -2.66), 보통(C-M: 1.14, -2.48), 그리고 절대 반대(C-R: 1.38, -2.25)의 순으로 공간지도의 좌-우/하-상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복지지출 이슈에서도 발견되는데, 유권자의 평균 좌표는 복지지출축소 절대 반대(D-L: 0.81, -2.67), 보통(D-M: 1.25, -2.40), 전적 찬성(D-R: 1.44, -2.38)의 순으로 역시 공간지도의 좌-우/하-상을 일정하게 진보와 보수적 유권자로 구분하고 있다.⁹⁾ 그러나 복지지출 이슈는 유권자 평균의 위치로 판단했을 때, 재벌규제 이슈보다 균열의 폭이 작아 17대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 간의 경쟁과 정책적 대립에 상대적 영향력이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재벌규제 이슈의 경우 수직축의 균열 폭이 사용된 정책 이슈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7대 대선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무척 컸었고 이 분야에서 후보자 간의 정책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벌규제 이슈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평가는 지역주의의 틀을

8)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전통 보수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9) 재벌규제와 복지지출 설문은 각각 5개 항목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번 항목과 4번 항목에 응답한 사람의 평균 좌표는 공간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좌표는 위에서 제시된 추론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림 3〉 17대 대선의 공간지도와 경제 분야의 균열



C(재벌규제): -L: 전적 찬성, -M: 보통, -R: 절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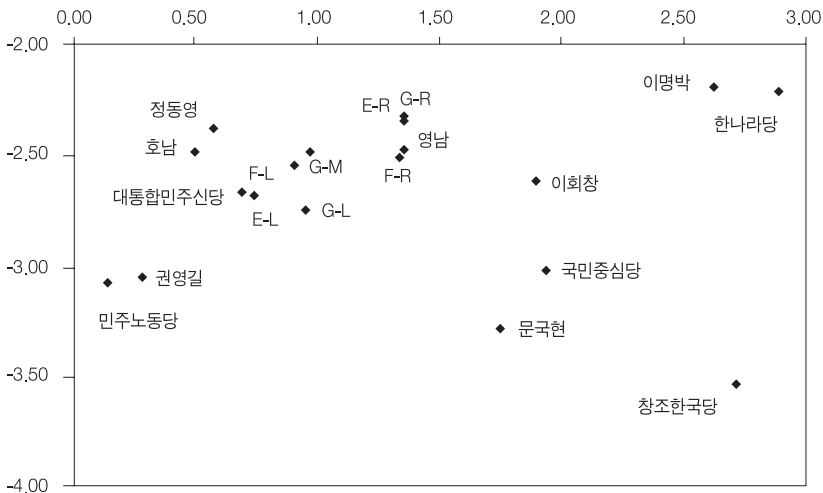
D(복지지출 축소): -L: 전적 찬성, -M: 보통, -R: 절대 반대

일정하게 넘어 정당과 후보자를 정렬시켰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게 한다. 경제 이슈의 수직축 균열과 관련하여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큰 차별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진보적 유권자들의 평균 좌표는 수직축에서 정동영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권영길 후보나 문국현 후보에 훨씬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여권의 후보로서 나누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이슈 분야에서 문국현 후보에 비해 특히 진보적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사회분야 관련 이슈의 균열구조를 17대 대선의 공간 지도 상에 표시한 것이다. 전형적인 탈물질주의를 탐색하게 하는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평균 좌표는 환경보호 선호(E-L: 0.75, -2.68)가 경제성장 선호(E-R: 1.35, -2.35)보다 수평축에서는 좌측에 수직축에서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분야 관련 이슈와 비슷한 균열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이슈의 균열 양상은 균열의 전개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이슈의 경우 전형적인 수평축 균열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사형제 이슈는 전형적인 수직축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개혁 이슈에서 유권자의 평균 좌표는 교육기회의 평등화 선호(F-L: 0.97, -2.49)가 경쟁을 통한 학업향상 선호(F-R: 1.33, -2.50)보다 수평축의 좌측에 위치해 있지만 수직축의 위치는 거의 비슷해 전형적인 수평축의 균열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사형제에 관한 유권자들의 응답의 평균 좌표는 전면 폐지(G-L: 0.95, -2.75), 반인륜적 범죄 제외 폐지(G-M: 0.90, -2.54), 그리고 현행 제도 유지(G-R: 1.35, -2.34)가 수평축에서는 일관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수직축에서는 상하 보수-진보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비록 17대 대선에서 주요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사형제가 전형적인 수직축의 균열구조를 보인다는 사실은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인권을 의미하는 자유지상주의 가치

〈그림 4〉 17대 대선의 공간지도와 사회 분야 균열



E(경제성장 대 환경보호): -L: 환경보호에 우선, -R: 경제성장에 우선
 F(교육분야 경쟁 대 평등화): -L: 교육기회의 평등이 중요, -R: 경쟁을 통한 학업향상이 중요
 G(사형제): -L: 전면 폐지, -M: 반인륜적 범죄 제외 폐지, -R: 현행제도 유지

관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해주고 있다.

요약하면, 17대 대선의 공간지도는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에서 유권자들이 담지하고 있는 이념적 균열구조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들을 정렬시키고 있다. 지역주의가 수평축에서 지배적인 균열이라는 선형적인 가정 아래 복구된 이념지도는 대북지원 정책과 한미관계, 그리고 교육정책이 수반하는 균열구조가 대체로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동일한 정치적 갈등구조를 지니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선거경쟁을 규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수평축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지만 재벌규제와 복지지출 이슈 등은 정치외교 관련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직축의 균열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사이의 경쟁구도를 일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의 탈물질주의 이슈 또한 유사한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는 수직차원에서 뚜렷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러한 경험적 발견과 추론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로 공간지도 상의 수평축과 수직축의 유권자 분포를 위에서 분석된 정책 변수들과 또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회귀시켜 보았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허닉의 공간분석기법이 공간지도상의 후보자나 정당의 위치에 비해 유권자들의 위치를 측정하면서 많은 잡음(noise)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구분해 종속변수로 활용한 회귀분석은 오차항의 큰 분산 규모로 인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작은 R^2 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가변수로 조작된 영남과 호남 변수는 수평축의 유권자 분포와 가설이 예견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수평축이 지역주의 균열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변수는 수직축의 유권자 분포와는 아무런 통계적 관계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축이 지역주의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균열축이며, 따라서 이 축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되는 정책이나 이념의 균열구조가 지역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정책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대북지원과 한미관

(표 1) 17대 대선 공간지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OLS)

변수	수평축		수직축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영남	0.17 (0.10)+	0.06	-0.05 (0.11)	-0.18
호남	= -0.48 (0.13)***	-0.13	-0.02 (0.13)	-0.01
대북지원	0.20 (0.06)***	0.11	-0.09 (0.07)	-0.05
한미관계	0.15 (0.06)*	0.09	0.09 (0.06)	0.05
재벌규제	0.06 (0.04)	0.05	0.12 (0.04)**	0.11
복지지출	0.05 (0.04)	0.05	0.003 (0.04)	0.003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	0.25 (0.10)*	0.09	0.19 (0.10)+	0.07
교육: 경쟁 대 평등화	0.20 (0.10)*	0.07	-0.15 (0.09)	0.05
사형제폐지	0.08 (0.07)	0.04	0.13 (0.07)+	0.06
성별	0.06 (0.09)	0.02	0.06 (0.10)	0.02
연령	0.08 (0.04)+	0.07	0.08 (0.04)+	0.07
교육수준	-0.17 (0.09)+	-0.08	0.15 (0.09)	0.07
소득수준	0.02 (0.03)	0.02	-0.03 (0.04)	-0.03
상수	2.18 (0.47)***	-	-0.37 (0.51)	-
N	869		869	
R ²	0.15		0.04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계, 그리고 교육정책(경쟁 대 평등화) 변수가 가설이 예견하는 방향으로 수평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정책 변수들이 자아내는 이념적 균열이 그동안 지역주의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정당체제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사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오랫동안 지역정당체제의 대표적인 이념적 균열로서 작용해 왔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주고 있다.

대북지원과 한미관계 변수가 수평축에서의 유권자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재벌규제 이슈와 사형제 변수는 수직축에서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 변수는 수평축과 수직축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직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의 효과는 지역주의 갈등구조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체제변화(regime change)는 갈

등구조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완전한 정치적 재정렬은 새로운 균열이 일으키는 정치사회적 갈등구조가 현재의 지배균열과 완전하게 양립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만큼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정당체계가 형성 가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주의와 독립적인 균열구조를 지니는 이슈를 발견하고 그것이 자아내는 갈등구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독립적인 균열구조를 지니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배균열에 의해 흡수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직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경제와 사회 분야의 이슈는 한국 정당정치의 재구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의 방법, 삶의 질, 그리고 개인권 등의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자아내는 갈등구조가 확대될 경우 유권자들은 서서히 지역주의와 다른 틀을 통해 정치세계를 평가하고 그들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하며 이는 곧 정당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VI. 맺음말

이 글은 지난 17대 대선을 사례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정당체계의 이념적 구성을 지역주의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정책들의 균열 구조로 설명하고자 했다. 비교정치 분야의 정당연구의 경험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당체계가 현재의 정치사회적 지배균열을 따라 정렬된 것이며, 유권자는 지배균열과 정당체계의 구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균열이 일으키는 갈등의 규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선거가 정당 간의 인물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의 불모가 되었다든지, 의회가 지역적 향리성의 경쟁 공간으로 전락했다든지, 정책적 성과가 아니라 지역이라는 집단의 기준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언급들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물질주의든 자유지상주의든 새로운 균열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존 연구는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문제는 지역주의와 다양한 균열구조의 존재여부를 탐색함에 있어서 얼마나 경험적 엄밀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균열구조가 현존하는 지배균열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병렬적인가 아니면 직교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균열이 발생시키는 갈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갈등들이 정당체계의 구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은 엄격한 경험분석을 요구하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헌함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었다.

먼저 이 글은 허닉의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17대 대선에서의 정당과 후보자 간의 경쟁구조를 2차원의 공간지도로 측정했다. 아울러 정치외교,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 자아내는 유권자 내의 균열들이 복구된 공간지도 내의 정당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경험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당체계가 여전히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지원이나 한미관계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은 지역주의 균열과 동일한 차원인 수평축에서 정당 간의 경쟁과 갈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벌규제와 복지지출 등의 경제적 이슈는 일견 지역주의 수평축과 무관해 보이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는 재벌규제 이슈와 같이 어떤 경제성장이나는 문제가 유권자들 사이에 지역주의와 상관없는 이슈로 등장했으며, 그것이 수반하는 갈등구조는 새로운 균열과 함께 유권자와 정당체계의 재구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와 같은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지역주의와 동일한 차원의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탈지역주의 차원에서도 갈등구조가 발견되고 있고, 사형제 이슈가 함의하는 개인권과 같은 자유지상주의 가치관은 지역주의와 직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지원, 한미관계의 이슈가 수평축에서 지역주의와 같은 성격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벌규제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와 환경, 인권 등의 이슈가 지역주의와 직교하는 공간지도의 수직축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 조심스럽지만 흥미로운 추론을 제시하게 한다. 첫째,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남북관계나 정치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는 지역주의라는 필터를 통해 정당 간 갈등과 경쟁구조에 투영되어 왔었다. 그리고 이 글의 경험분석 결과는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남북관계나 한미관계 등의 정치적 이슈가 자아내는 갈등과 갈등의 조직화를 어떻게 하면 지역주의와 절연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둘째, 공간지도의 수직축에서 발견되는 균열구조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것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게 한다. 한국사회의 정치개혁이 일정한 제도적 공고화 수준을 넘어섰고 남북관계 또한 일정한 성과와 함께 안정적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정치세계의 대한 평가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경우 서구사회의 근대의 주요한 이슈인 성장과 복지, 그리고 탈근대의 이슈인 환경이나 인권 문제들이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적 균열로 동일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경험분석 결과는 공간지도의 수직축에서 존재하는 균열의 정도가 수평축의 균열보다 갈등의 규모에서 아직은 보잘것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축의 이슈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갈등들이 확대될 경우 유권자들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정치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정당지지 또한 이러한 새로운 평가를 반영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정당체계 또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수직축의 이슈들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제성장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논쟁을 학문공동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집문당.
- _____.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193-218.
- 김만흠. 2003. “16대 대선과 지역주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_____.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215-237.
- 김재한. 1994. “서구정당체계의 재정렬.”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 나간채. 1991.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마인섭. 2004.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 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마인섭·장훈·김재한.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29-52.
- 박찬욱. 2005. “지역 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4집 2호: 69-123.
- 안순철. 2001. “한국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예측공간 분석: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153-171.
- 안순철·조성대. 2005. “민주화이후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와 전망: 공간이론과 2002년 대통령선거.” 『21세기 정치학회보』 15집 1호: 111-131.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장 훈. 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현출.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321-344.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
- 조성대. 2003. “공간이론(Spatial Theory)과 미국 다수후보(Multicandidate) 대통령선거: 1968, 1980, 1992, 1996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311-336.
- _____. 2004. “4·15총선과 한국정치의 갈등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의정연구』 10권 2호: 209-235.

- _____. 2007. "양극화 시대 미국정치의 이념적 재편성과 대중의 정당일체감: 1972~2004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집 4호, 193-213.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세대." 2003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참여연대. 2007. "100인 유권자위원회 2007년대선 정책 평가 워크숍." 자료집 2007/10/20.
-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최준영. 2008. "지역감정은 존재하는가?: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을 중심으로." 발표 논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8/2/27.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375-394.
- Bartolini, Stefano, and Peter Mair. 1990.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z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Brady, David W. 1988. *Cri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Policy Mak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Çarkoğlu, Ali, and Melvin J. Hinich. 2006. "A Spatial Analysis of Turkish Party Preferences." *Electoral Studies* 25: 369-392.
- Dow, Jay K. 1998. "A Spatial Analysis of Candidate Competition in Dual Member Districts: The 1989 Chilean Senatorial Elections." *Public Choice* 97: 451-474.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nich, Melvin J. 2005. "A New Method for Statistical Multidimensional Unfolding."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s* 34: 2299-2310.
- Hinich, Melvin J., and Michael C. Munger.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inich, Melvin J., Valeri Khmelko, and Peter C. Ordeshook. 1999. "Ukraine's 1998 Parlia-

- mentary Elections: A Spatial Analysis.” *Post-Soviet Affairs* 15: 149-185.
- Inglehart, Ronald. 1977.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Key, V.O.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7-1.
- Kitschelt, Hebert. 2004. “Diversification and Reconfiguration of Party Systems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Europäische Politik*: 1-23.
- Lin, Tse-Min, Yun-Han Chu, and Melvin J. Hinich. 1996. “Conflict Displacement and Regime Transition in Taiwan: A Spatial Analysis.” *World Politics* 48: 453-481.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Myagov, Misha, and Peter C. Ordeshook. 1998. “The Spatial Character of Russia’s New Democracy.” *Public Choice* 97: 491-523.
- Schattschneider, E.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Shafer, Bryon, E., and William J. M. Claggett. 1995. *The Two Majorities: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tonecash, Jeffrey M. 2006. *Political Parties Matter: Realignment and the Return of Partisan Voting*,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Sundquist, James L. 198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Revised vers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ABSTRACT]

Cleavage Structure and Party System: Regionalism, Ideology, and the 200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ho, Sung-dai | Hanshin University

Based on two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on the one hand, a bulk of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economic or cultural cleavages and party system and on the other hand, a spatial theory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parative electoral behavior,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 of regionalism and various policy cleavages to party system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Specific empirical questions are: First, how does spatial map of Korean politics interpret the party competition in this election; Second, what does it provide for the relations of regionalism and various policies to partisan conflict and competition; Lastly, is there any possibility to find a conflict displacement in current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The survey data with 1201 respondents by Sogang University and Hankook Research a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KeyWords | spatial theory, cleavage structure, regionalism,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party system